KT노동조합

KT TRADE UNION
2007년 1월 31일(수)
13th

■ **발행인** : 지재식 ■ **편집인** : 최광수 ■ **주소** : 463-7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 **대표전화** : 031-727-4820(편집국 4836) ■ **팩스** : 031-727-4815 ■ **홈페이지** : www.kttu.or.kr ■ **편집디자인** : 디자인 여백(02-2279-9631)

창립 25주년 기념 및 합동추모비 제막식

"조합원의 생활과 공동체 복원을 위해 노동조합의 역량 쏟을 것"

노동조합 임원과 유가족이 추모비 제막식을 진행하고 있다. 추모비는 노동조합의 민주화를 위해 불꽃처럼 살다간 동지들을 '불꽃'으로 형상화해 제작됐으며 추모비 뒷면에는 김낙성 김왕찬 오용철 김양중 동지의 명단이 나란히 적혀있다.

노동조합은 25일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노동조합 창립 25주년 기념 및 합동추모비 제막식을 가졌다.

지재식위원장은 창립기념 및 추모사를 통해"KT노동조합의 4반세기 역사는 우리나라 격변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면서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을 철폐하기 위해, 통신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노동자들은 수배와 해고 등 온갖 고초를 겪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 80, 90년대는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으며 바로 그러한 투쟁의 역사에 「고(故) 김낙성, 김왕찬, 오용철, 김양중」 동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의 귀결은 사람"이라면서 "고(故) 김낙성, 김왕찬, 오용철, 김양중 동지가 그랬던 것처럼 조합원의 생활과 공동체 복원 사업에 노동조합의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모사업위원회 집행위원장인 김해관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추모행사가 1994년부터 진행돼왔으나 지금까지 개인별로 치러지고 10여년이 넘는 기간을 거치다 보니 규모도 축소되고 결집력이 떨어졌다"면서 "이제는 노동조합의 위상에 걸맞고 조합원의 관심도 이끌 수 있는 결집된 추모사업을 준비해야 한다"며 합동추모비 제막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족대표로 고(故) 김낙성 동지의 동생인 김낙은씨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추모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이제 고인이 된 분들은 우리뿐만아니라 KT노동조합 조합간부 및 조합원 여러분과 가족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추모비는 불꽃을 상징하고 있으며 앞부분에는 "동지여 끝내지 못한 그대의 소망을 생각하면 / 우리의 가슴은 몹시도 저려오지만 / 한결 같은 그대의 뜨거운 열정은 / 지금도 우리 모두의 가슴을 끓어오르게 하네"라는 구절이 쓰여있다. 또한 뒷면에는 고 김낙성 · 김왕찬 · 오용철 · 김양중 동지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다.

민주노총 위원장 · 사무총장에 이석행 · 이용식

일반 부위원장 주봉희 · 허영구
여성할당 부위원장 김은주 · 김지희 · 진영옥

민주노총 새 지도부가 탄생했다. 26일 역도경기장에서 시작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자정을 훌쩍 넘겨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속에 위원장 · 사무총장 후보조에 이석행 · 이용식 후보조가 당선됐다. 여성명부 부위원장은 김은주 · 김지희 · 진영옥 후보가 당선됐으며 일반명부는 주봉희 · 허영구 후보가 당선됐다.

5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석행 당선자는 인사말을 통해 "저의 승리는 이 자리에 계신 대의원과 80만 조합원 동지들의 승리로,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승리로 이어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현장대장정을 통해 조직력을 확실하게 복원시키겠다"고 강조하면서 현장대장정 공약에 대한 결의를 다짐했다. 이 당선자는 "끝가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며 단결을 촉구하고 "동지들을 믿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동지와 이 땅 민중을 위해 바치겠다"며 결심을 밝혔다. 이용식 사무총장 당선자도 "저도 (자본과 정권으로부터)정말 이기고 싶다"며 "저를 버리고 조직에 복무토록 하겠다"며 인사를 전했다.

정기대대 바로 전날 집행유예로 풀려난 허영구 부위원장 당선자는 "(저를 당선시켜준)그 뜻을 받아 안고 열심히 자본과 권력에 맞서 투쟁하고, 민중생존권을 위해 힘차게 투쟁하겠다"며 당선소감을 표시했다. 한편, 파견법 철폐에 집중하고 있는 주봉희 부위원장 당선자는 "조합원에게 겸손함을, 자본과 정권에게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하게 싸우겠다"며 "약속한대로 비정규직, 장기투쟁 사업장을 껴안고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여성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은주 후보는 "공약들이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당당한 민주노총을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로 감회를 전했다. 진영옥 당선자와 김지희 당선자는 "동지들이 보내주신 결심과 결의를 모아 진정 승리하는 민주노총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당선소감을 표시했다.

2007년 효도휴가비 및 성과급 지급계획

2007년 효도휴가비 및 성과급 지급계획이 아래와 같이 확정됐다.

1. 지급계획 및 일시

구분	1월	2월	3월	6월	7월
효도 휴가비		100%			
성과급	100%주1)	50%	0~150% 잔여액주1)	100%	임금보전 50%
차등율			±15% (연봉 · 호봉제 동일)		

구분	8월	9월	11월	12월	
효도 휴가비		100%			
성과급	100%		100%	임금보전 50%	
차등율	±15% (연봉 · 호봉제 동일)				

※ 주1) 3월 지급예정 2006년 경영실적 연동성과급(0~150%) 중 100%를 1월 조기지급 / 지급일 : 1월 31일
주2) 3월 지급예정 성과급 중 1월 조기 지급분을 뺀 잔여액
주3) 7월, 12월 임금보존은 "2004 단체교섭 합의서(2004. 8. 6)"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을 위해 성과급 80% 별도가산에 따른 지급(근무년수에 따른 차등지급)

2. 지급계좌

1) 효도휴가비 : 별도계좌(급식통근비 계좌)
2) 성과급 : 급여계좌. 끝.

"불꽃이 되어, 역사가 되어 우리 곁에 머문 동지"

앞서간 동지들의 뜻을 기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반성하는 곳
합동추모비를 방문합시다.

>> 추모비 건립 장소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경우
지하철 2호선 강변역 동서울 터미널에서 일죽행 버스를 타시고 일죽터미널에서 하차 택시(5000원)를 이용
동서울에서 일죽행 버스 : 첫차 6:40 ~ 막차:18:40 배차간격 : 1시간

승용차를 이용하실 경우
중부고속도로 일죽IC ➡ 38번 국도 장호원방향으로 3분후 ➡ 능국삼거리에서 이천, 수산리 방향으로 좌회전 ➡ 10M 후 삼거리슈퍼 앞 좌회선 ➡ 다리 앞 사거리에서 우회전 ➡ 유토피아추모관
영동고속도로 양지IC ➡ 진천죽산방향으로 직진하여 방초리로 좌회전 ➡ 100M 후 화곡리 방향으로 우회전(방초초교 가기전) ➡ 죽화초등학교 지나 다리 지나 좌회전 ➡ 유토피아추모관

연락처 : 유토피아 추모관 : 031-673-7904
노동조합 산업안전국장: 031-727-4845

노동조합 창립 25주년 기념 및 합동추모비 제막 기념사
"인간성과 공동체를 회복하는 운동할 것"

먼곳까지 와주신 동지여러분 그리고 유족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노동조합은 창립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먼저가신 동지들의 합동추모비를 건립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KT노동조합의 4반세기 역사는 우리나라 격변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합니다. 지난 25년은 갈등과 반목의 역사도 있었고 승리와 감동의 역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을 철폐하기 위해, 통신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노동자들은 수배와 해고 등 온갖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80, 90년대는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투쟁의 역사에 김낙성, 김왕찬, 오용철, 김양중 동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고는 합니다. 동지들의 얼굴이나 추억뿐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조합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헷갈리고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얼굴 한번 본적없는 조합원들은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며 현실에 매우 빠르게 적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모비를 제막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추모행사가 단지 앞선 동지들을 추억하는 자리로 머물지 않고 우리의 활동을 반성하고 결의하는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용자들은 갈수록 효율과 생산성을 따지고 조합원들에게 더 높은 강도의 노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조합원들은 수년간 지속돼 온 고용불안으로 심적 피로감이 쌓여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노동조합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봐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잃어버린 인간성을 되찾고 공동체의 삶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의 귀결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조합원의 생활 속에 밀착된 생활노동조합, 감성노동조합이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고(故) 김낙성, 김왕찬, 오용철, 김양중 동지도 사람은 누구나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노동운동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조합원의 생활과 공동체 복원 사업에 노동조합의 역량을 쏟을 생각입니다.

동지여러분!

오늘 노동조합 창립 25주년을 기념하고 합동추모비를 제막하는 뜻깊은 날이지만 기뻐하는 마음보다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많은 조합간부들과 조합원들에게도 앞서 간 동지들의 뜻을 알렸으면 합니다.

끝으로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유족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1월 25일
KT노동조합 위원장 지재식

2007년 달라지는 제도 – 양도소득세 실거래가로 부과 · 자녀수에 따른 소득공제확대 · 건강보험효율 조정 등

올해 모든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고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강화된다. 또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셋째 아이부터 1인당 100만원씩 추가공제해주는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공제 대상에 태권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대상 기준이 종전 월 소득평가액 14만원 이하에서 모든 저소득층으로 확대되고, 대상 서비스에 초고속 인터넷이 추가된다. 부모들의 보육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대폭 확대되며 유산할 경우에도 임산부 건강보호 휴가가 주어지는 등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양도세의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키로 하고, 실제 부동산과 같이 거래되고 있는 입주권과 분양권도 신고대상에 포함시켰다. 1세대 2주택자, 비사업용 토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율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1세대 2주택 양도시 50%, 비사업용 토지와 부재지주소유농지, 임야 등 양도시 60%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다만, 2주택으로서 수도권과 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기타지역 소재 3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주택건설 예정지역에 속칭 '알박기'가 어려워질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에서 사업주체가 건설대지 면적의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을 경우 최소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 10년전(현재는 3년)에 땅을 구입해야 매도청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 불리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키 위해 종전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했다. 앞으로 자녀가 2명인 경우는 50만원, 3명 이상인 경우는 추가 1명당 1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취학전 아동의 보육.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태권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지출한 수업료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추가했으며, 근로자 본인이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해 수업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도 공제대상에 포함시켰다.

올해부터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임산부의 건강보호를 위해 유산이나 사산할 경우, 임신 16주 이상일 경우부터 최대 90일까지 휴가가 주어진다. 또 육아 · 임신 · 출산 등으로 휴직했을 경우 휴직기간내 퇴직수당은 전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해 산정하고, 육아휴직기간에도 연가일수산정에 포함해 휴직기간의 불이익을 최소화했다.

올해부터 자녀수가 많은 가구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자녀가구 추가공제제도가 도입돼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인 경우 50만원, 3명 이상인 경우는 추가 1명당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취학전 아동이 태권도 도장 등에 다닌 비용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근로자가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해 학점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을 경우도 공제가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2년 동안 10억원 이상 체납한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되고, 이들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1억원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 ● 다자녀 추가공제제도 신설 및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

저출산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다자녀가구에 불리한 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가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50만원,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1인당 100만원이 추가공제된다.(자녀가 3명인 경우는 150만원, 4명인 경우 250만원, 5명인 경우 350만원씩 각각 공제된다.)

● ● 모든 부동산 양도시 실거래가 과세 및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 강화

올해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또 1세대 2주택자, 비사업용 토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등에 대해 양도세율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1세대 2주택 양도시 50%, 비사업용 토지 및 부재지주소유농지 · 임야 · 목장용지 양도시 60%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단, 1세대 2주택으로서 수도권 · 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기타지역 소재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등은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보유자가 농지소재지 시 · 군 · 구와 연접 시 · 군 · 구에 거주하는 농지나 자경하는 농지, 농업 주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등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허위신고 혐의가 높은 건에 대해서는 신고자 등에게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에게 조사권이 부여되고, 실거래 지연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담이 현행 취득세 3배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 ●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은닉재산 신고시 포상금 지급

체납 발생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단, 체납관세 등에 대해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금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가 도입된다.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1억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전자금융거래에서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사고가 발행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보호 강화를 위해 공인인증서 활용 의무화, 전자지급수단의 발행한도 및 이용한도 제한 등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해 이용자의 이의제기나 손해배상 문제 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절차를 마련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아닌 전자금융업자가 금감위의 허가.등록 후 일부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 ● 보험상품 설명제도 개선

복잡하고 전문화된 보험상품 내용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험상품 설명제도를 실제 구매한 가입조건에 따른 맞춤형 설명서로 대체토록 개선된다. 또 상품설명 누락 등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확인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무자격자 보험모집 및 부실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모집자 실명제도 실시된다

●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대상이 기존 월 소득평가액 14만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모든 저소득층으로 확대된다. 이럴 경우 감면대상 저소득층은 13만명 늘어나고 감면금액도 103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대상 서비스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추가된다. 현행 시내전환, 시외전화, 이동전화, 114안내, 무선호출에 국한돼 있었으나 여기에 보편화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감면대상자는 12만명 정도 늘어나고 감면금액도 155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 농지 내 축사설치 가능

그간 농지 안에 축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전용 또는 신고를 거쳐야 했으나 농지법을 개정해 축사부지도 농지로 보아 쉽게 축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 ●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약값 대비 효과가 좋은 의약품만 선별해 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이 실시된다. 직권 등재되는 필수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제약사가 자율 신청을 하되 신약의 보험등재 여부, 가격 산정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상을 실시한다. 최초 복제의약품 등재시 특허만료 의약품의 가격을 20% 인하하고 복제의약품의 가격도 내린다.

● ● 건강보험 보험료율 조정

현행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6.5% 인상 · 조정한다. 직장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의 4.77%로, 지역가입자는 등급별 적용점수에 139.9점을 곱해서 산정한다.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인정기준 변경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 금융소득 보유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 직역(직장 · 지역)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높였다.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 ● 아파트 경비원도 최저임금 적용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3480원으로 인상되고,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 · 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다만 감시 ·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강도나 근무형태가 일반근로자들과 다르다는 점을 반영해 2007년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의 70%, 이후에는 80%를 적용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1만1000여명이 월평균 4만6000원정도 임금이 인상된다. (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02-2110-7121)

● ● 육아휴직급여 50만원

육아휴직급여가 2007년 2월부터 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부터 끝난지 12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노동부 여성고용팀 02-2110-7142)

● ● 국가기술자격 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인터넷으로 접수해야한다. 원서접수에서 수험자가 부담하던 정보이용료가 폐지됐으며, 인터넷접수가 어려운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각 지사에서 접수안내 도우미에게 부탁해도 된다. (노동부 자격제도팀 02-503-9758)

행자부, "불법파업 대체인력 투입"

노동관계법과 충돌에 "노동관계법이 우선되어야" 변명

작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7월 말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에 공공 사업장은 물론이며 민간 사업장까지 포함해 노동자들의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하고 있어 노동자의 파업권 보장을 두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그간 그동안 국가기반체계의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이를 재난으로 보고 소방재청에서 이를 총괄 관리하던 것을 행정자치부가 해당 시설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해 결국 노동자들의 파업의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이 직접 개입해 대체인력을 강제 투입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해 노동자 파업권 제약의 소지가 더욱 커졌다.

행정자치부는 30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정부는 앞으로 철도, 병원, 발전소 등 국가기반시설을 담보로 하는 불법파업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라며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노동자의 불법 파업과 우발적인 사고로 시설의 마비가 우려될 시는 대체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은 상정 당시부터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을 억압하고 단체행동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역력한 개악 법안"이라는 노동계의 강한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행자부, "보도자료 잘 못된 것" 해명, 노동계 "속이 뻔히 보이는 행태"

행정자치부가 30일 밝힌 '국가기반시설' 지정안을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산업, 의료보건, 원자력, 건설 환경, 식용수 등 9개 분야에 발전소, 철도, 항공, 화물, 도로, 항만, 혈액원, 정수장 등 공공부문의 모든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노사관계선진화방안 등에서 논의되었던 노동관계법과도 부딪치는 것으로 노동관계법에서는 필수공익사업장을 '철도, 전기, 병원, 수도, 가스, 석유, 한국은행, 혈액공급, 항공부분'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체근로 투입은 파업 참가 인원의 50%에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낸 안은 거의 대부분의 공공부문 사업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체인력 투입의 폭 역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나간 보도 자료가 잘못 되었다"라며 "파업을 재난으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은데 보도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확대해석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노동관계법과의 충돌에 대해 "당연히 노동관계법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 행정자치부의 입장은 '실수'로 밝혀졌지만, 이후 시행 까지 남은 6개월 동안 행정자치부는 시행령을 비롯해 '국가기반시설' 지정안을 완료할 계획이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파업을 재난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위헌이다"라며 "행정자치부 입장대로라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탄압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행자부가 파업 시 대체인력투입은 노동관계법의 규정과 노사협의에 따라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우리는 믿을 수 없다"라며 "만약 정부가 불순한 의도를 버리지 않고 노동기본권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시에는 위헌소송 등 법적인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수정 공공서비스노조 부위원장도 "행자부가 노조 파업 시에는 노조법이 우선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행태이다"라고 지적하고, "지난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과정에서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권 박탈에 있어 원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바 있다"라며 "국가기반산업 지정 과정도 해당기관과 충분한 논의도 없이 행정자치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산별조직인 공공서비스노조에서는 이와 관련한 이후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 적용하라"

30일 산재보험법 개혁 전국 노동부 앞 집회

정부가 일하다 다친 노동자의 산업재해 인정을 어렵게 만들고 산재노동자의 권리를 축소시키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악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노동자들이 이에 항의하는 투쟁을 연이어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2시 전국의 지방노동부 앞에서 '노동자 건강권 확보와 산재보험법 전면개혁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어 '산재보험법 개악'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창원, 광주, 대전 등 10여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렸다.

이어 민주노총은 31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500여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산재보험개혁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염원하는 노동자들의 소원지를 주변의 나무에 걸고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민주노총은 전국의 노동청을 일제히 항의방문해 산재보험법 개악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했으며, 18일부터 29일까지 과천 정부종합청사와 전국 노동청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또 24일 부산과 경남, 울산지역 노동자들이 부산지방노동청에 모여 항의집회를 가졌다.

금속노조 윤종선 산안부장은 "노동강도 강화와 스트레스로 조합원들의 건강권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데 정부는 산재보험법을 개악하려고 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넘어 전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민주노총을 뺀 노사정 합의를 통해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해 12월 입법예고 했고, 지난 17일까지의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4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의견서를 국무총리 앞으로 보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토론회 등을 벌여 법안의 문제점을 적극 알려낼 예정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고, 고령자에 대한 휴업급여 삭감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임금노동자 1,550만명 중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1,100만명이다. 전체 노동자의 1/3에 육박하는 450만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을 전혀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화물차운전자, 모험모집인 등의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의 취업인구는 400만명이 넘는다. 그런데 정부는 60세 이상의 산재노동자들의 휴업급여를 감액하겠다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사용자에게 이의신청권을 부여해 산재신청을 어렵게 만들고, 재요양시 휴업급여를 삭감하는 등 개악내용이 상당히 담겨있다.

민주노총 김은기 노동안전부장은 "고령노동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들의 휴업급여를 깎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또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을 전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

행자부의 국가기반시설 지정안은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위헌이다.

지난 26일 정부는 국가기반체계보호라는 명분 아래 국가재난관리 기능을 강화한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 공포하였다.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곳은 응급상황에 따라 투입할 장비와 인력을 미리 지정하고 관리하며 민방위대와 군부대의 지원도 가능해진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의 경우에만 이러한 조치가 가능했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사회적 재난까지도 재난의 범위로 확대하고 있다.

더욱이 어제(30일) 행정자치부는 '국가기반시설 지정안'의 지정대상에 공공시설은 물론 자동차, 반도체, 중공업, 철강과 함께 현대, 기아차, 삼성전자 등 민간기업 29곳도 포함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행자부가 내부 업무용으로 작성한 것이며 아직 시설지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해명자료를 배포하여 민간사업장에 대체인력 투입은 잘못된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우리는 이러한 발상자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파업을 국가재난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위헌이며 명백한 노동탄압이다. 결국 노조활동을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불순한 의도로 파업 시 '대체 인력 즉각 투입 프로그램' 등을 가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아울러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비록 오늘 행자부가 대기업 파업시 대체인력투입은 노동관계법에 따라서만이 가능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체인력과 장비의 투입은 재난시에만 가능하며, 파업 등의 경우는 노동관계법의 규정과 노사협의에 따라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제출했지만 우리는 믿을 수 없다. 행자부가 "앞으로 철도.병원.발전소 등 국가기반시설을 담보로 하는 불법파업을 방지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라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 만약 정부가 불순한 의도를 버리지 않고 노동기본권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계속 할 시에는 위헌소송 등 법적인 대응을 포함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7년 1월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지난 26일 역도경기장에서 열린 제39차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제5기 지도부로 선출된 임원들이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좌로부터 회계감사 김세훈 부위원장 김은주, 위원장 이석행, 사무총장 이용식, 부위원장 진영옥 김지희 허영구 주봉희 동지다.

민주노총 5기 지도부 인터뷰

현장 대장정 통해 조직 복원할 것

"정부는 민주노총과 교섭을 원한다면 끼워맞추려는 자세부터 버려야한다."

노동부 장관이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방문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얘기했다. 방문을 받아들일 것인가. 만난다면 어떤 얘기부터 할 것인가

헌법에 교섭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동안 정부와 사용자 단체가 교섭을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대화를 하겠다. 그러나 교섭은 분명한 틀을 갖춰서 하겠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대화를 해야 한다. 아직 장관이 온다는 소식을 듣지는 못했다.

한국노총 관계를 복원할 것인가

(당선 이후 한국노총으로부터)직접 전화를 받지는 못했다. (현 시점에서)관계복원은 합당치 않다. 충돌지점에 대하여 그런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나름대로)3가지 전략전술이 필요하다. 자본에 대한 전략과 전술, 권력에 대한 전략전술, 한국노총에 대한 전략전술이 그것이다. 전략은 (공개석상에서)공개하기 어렵다. 전술은 풍부하다.

민주노총 통합방안은 무엇인가.

(무엇보다)이번 선거를 축제형식으로 치러야 하는데 선거관리행사로 전락해버린 점이 아쉽다.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폭이 적었다.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방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상층에서는 혁신발전위원회를 두어 의견그룹이 상시적으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상층에서 아무리 통합을 얘기해도 이견이 다른 상태에서 통합은 쉽지 않다. 현장대장정을 통해 조합원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위아래 요구를 모두 반영해 통합하겠다.

민주노총의 혁신방안은 무엇인가.

중앙간부들이 비정규 투쟁과 최저임금 노동자를 말하면서도, 과연 그 분들 입장에 절박하게 닥아서는가라는 것이 (제)의견이었다. 혁신이라는 것은 80만 조합원 외에도 1500만 노동자, 민중들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다가가 그 분들이 살아가는 쪽에 민주노총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런 요구를 하게 만드는 것이 혁신의 기본이다.

민주노총내 좌파세력들이 강경한 색깔을 띠고 있다. 전투적이지 않나.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책은. 전임 위원장(이수호 전 위원장)은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을 강조했다. 국민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오래가지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 기자들이 도와주어야 한다. 노동운동이 강경하지는 않다. 전두환 정권 당시 단위노조별로 문제를 풀려했다. 프랑스가 파업투쟁을 했다. 우리는 파업투쟁을 해도 기업별노조로 흩어져 싸우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단사 문제를) 언론이 부각시키고 강경하다고 말한다. 프랑스의 경우 사유제한제도를 넓히려는 과정에서 (프랑스 국민들이)강력하게 싸웠다. (그걸 보면서)부러웠다. 우리는 언제 저렇게 싸울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전투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탈리아 항공사 셔터문이 내렸어도 (현장은)평화로웠다. 항공사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 "파업이야말로 노동자 권리이고 천재지변"이라고. 이게 바로 기업별 노조와 산업별 노조 차이다. 산별노조가 정착되도록 기자들이 도와주어야 한다.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특히 현대자동차 노사 문제에 대하여 언론이 심하게 왜곡보도했다. (새 지도부는)산업별 노조 건설과 관련해 제도개혁 투쟁으로 옮겨간다.

현장대장정 계획에 대해 말씀해달라

2월 한달동안 준비하고 3월부터 현장대장정을 시작한다. 한달 동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산별 위원장 등과 (이 문제를 토론하고)고민하겠다. 노동운동이라는 틀 안에서 각계각층 의견을 모으겠다. 힘있는 현장대장정이 되도록 하겠다.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겠다. 대중 조직력을 반드시 복원시키겠다. 그 조직력을 기반으로 교섭과 투쟁을 하겠다.

교섭에 대한 입장은

사무총장 시절 국회교섭을 했다. 그때를 보시면 알겠지만 교섭 조건이 되면 교섭답게 하겠다. 설령 교섭과정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번복은 옳지 않다. 노무현 정부들어 (노 정권을 일컫어) 참여정부라고 한다.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 정부가 민주노총을 (교섭)틀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고있으나 (무엇보다)교섭을 하려거든 초기 단계에서 (교섭을 위한) 자세가 되어있어야만 한다.

(민주노총이)동의하지 않으면 "떼쓴다"라고 얘기한다. 초기단계에서 열어놓고 고민해야 한다. (정부등이)틀을 만들어 놓고 (이후에 민주노총에게 나오라고)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무엇보다)힘을 키우기 위해 대중조직력을 복원시키겠다.

공무원노조 탄압문제만 해도 (정부는) 공무원과 (직접)대화해야 한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이다. 특수고용문제가 심각하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안 나서도 괜찮으니 (정부는)당사자와 (직접)대화하라. 일방적으로 (교섭틀을)만들어 놓고 (그후 민주노총에게)동의를 구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

대선을 맞아 민노당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특정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것인가? 선거공약으로는 "백만 선거인단을 만들어 대선후보를 결정하고, 그 후 300만표 득표를 위해 매진하겠다"라고 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의견을 달리하는 동지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빨리 토론하고 대화하겠다. 토론과 대화를 통해 결정하겠다. 선거공약사항으로는 "100만 민중경선을 통해 민주노총이 300만표 확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현장대장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이 필요한 것 아닌가

(민주노총이 이기주의적)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적어도 유럽같은 경우는 중등과정에서 노동교육을 받는다. 사무총장 재임시절에도 요구했다. (그러나)노동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는 없었다.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최저임금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싸움을 많이 했다. (민주노총 투쟁이)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까닭은 그분들이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변화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는 투쟁, 빼앗기고도 이기는 투쟁, 얻고 이기는 투쟁 등을 구분하겠다. 상황에 따라서 고민하겠다. 그러나 교섭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지는 않겠다.

일부 언론이 민주노총에 대해 왜곡보도하고 있다. 새 지도부의 언론대책은

무엇보다 "민주노총이 빌미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도덕적인 면에서, 그리고 조직내 조합원들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 계속 (일부 언론들이)음해한다면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대응하겠다.

당정이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 입장은

아직 그 부분을 숙지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모아서 새롭게 조직하겠다. 현재 조사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비정규직법 통과로 노동자, 민중이)시한부 인생으로 전락한다는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때문에)분노를 모으고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당면사업은 무엇인가

당면사업과 관련하여 오늘 아침(29일) 조준호 전 위원장과 만나 얘기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특수고용 노동자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할 생각이다. 산재법이 개악됐다. 내일(30일)부터 그 부분에 대해 방안을 정리하겠다. 한미FTA에이 문제가 모든 (사회)부문에 걸려있다. 언론노련을 방문해 우리가 싸울테니까 언론이 잘 취재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올해는 교섭과 대화를 병행하는데 현장조직력 복원이 중심이다.

우리은행 '정규직화' 토론회 열띤 논쟁

직군제 방식의 정규직화 현실적 대안인가 차별의 고착화인가

우리은행이 지난해 비정규직을 직군제 방식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노동계의 논쟁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최선의 대안'은 아니더라도 '현실적 대안'임을 강조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환영하는 입장과 정규직 내의 차별을 고착화시켜 정규직의 고용형태마저 후퇴시켰다는 입장이 노동계에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우리은행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둘러싼 노동계의 논쟁을 생산적으로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23일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의 주제는 '우리은행 사례, 정규직화의 새로운 가능성인가 차별의 고착화인가'였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은행 사례에 대해 노동계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자리여서 참가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비정규센터 "보상, 승진, 임금차별은 여전"

발제를 맡은 김성희 비정규센터 소장은 "기간제법 통과 이후 기업은 비정규직에 대해 계약해지, 분리직군화, 외주화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은행은 분리직군화를 택했는데, 이는 여전히 임금차별, 고용차별, 조직화 대상 차별이 지속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직무상의 차등을 통해 보상, 승진 상의 차등을 합리화하는 코스별 관리제도가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관측이었다. 그는 또 "분리직군제는 금융권내에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앞당겨 차별적 관행을 정당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우리은행의 사례는 정규직 내의 차별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금융노조 "최선 아닌 현실적 대안"

이에 대해 이승민 금융노조 정책실장은 "우리은행의 사례는 최선의 대안이 아니라 현실적 대안"이라며, "한국노총은 비정규직의 사용사유제한을 주장한 바가 없기 때문에 한국노총의 정책적 입장과 반하는 점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직군별 정규직화가 차별을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비정규법안의 차별금지조항을 교묘히 비껴가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점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비정규직의 외주화를 막은 것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조직화에 모티브로 부여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진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안)도 부정적 효과보다는 긍정적 효과에 더 무게를 실었다. 김 변호사는 "케이티엑스 여승무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오랫동안 투쟁을 하고 있는 점에 비교한다면, 우리은행의 사례는 외주화를 막고 비정규직이 정규직 속으로 들어온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도의 전문기술직과 비교적 단순한 미숙련 노동자가 동일한 임금 체계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점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외환딜러와 창구텔러에게 동일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는 상당히 취약하다"며, "직무성과급제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듯 직무에 따른 서열화가 발생하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논지였다.

사무금융연맹 "여성노동자에 대한 최하위직급 신설"

우리은행 사례의 이같은 긍정적 평가에 대해 사무금융연맹과 여성민우회는 즉각 반발했다.

김금숙 사무금융연맹 여성국장은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 1순위로 명예퇴직 당한 여성들은 비정규직으로 재입사했고, 다시 그들은 이제 직군제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전에는 초대졸 이상이면 5급부터 직급이 시작됐지만, 이제는 직군제 신설로 더 낮은 6급이 만들어졌다"며 "여성노동자에 대한 최하위 직급이 계속 만들어져서 여성을 저임금 노동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여성 노동자들이 싸워서 폐지시킨 여행원제도를 이제 다시 도입하는 것이 해법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전선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우리은행의 사례가 여성노동자의 고용형태를 오히려 후퇴시켰음을 강조했다.

박정옥 한국여성민우회 팀장도 우리은행이 여성노동자 전반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팀장은 "여성 노동자의 일에 대한 정당한 평가나 합리적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채, 단지 여성이 담당해왔던 업무이기 때문에 직군별로 분류하는 것은 여성노동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은행 사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개선모델이 아니므로 다른 모델을 만드는 방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우리은행 사례가 갖는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 노동계 내의 입장 차가 확인되는 자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여성노동자의 차별을 제도화하는 직군별 정규직화를 뛰어넘어 여성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정규직화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과 논리, 그리고 모델을 생산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했다. 우리은행 사례가 '모범답안'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사회연대기금 제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위해 5당 대표회담 하자"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31일 "소득이 낮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오늘의 가난과 불안이 노후에도 이어져 사회적 차별과 국가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지원정책을 촉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문래동 당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644만 명(월 소득 91만 원 미만의 노동자 423만 명, 차상위계층과 농어민 221만 명)의 이웃들의 가난은 사회적 문제이고 이에 대해 정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향후 5년간 이들에 대한 노후 연금혜택을 위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자기 것을 조금씩 내놓고 양보해서 연금보험료를 사회가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여야 각 당의 동참을 촉구하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5당 대표회담'을 제안하는가 하면,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도 밝혔다.

문 대표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나 사회적 연대 방안에 대한 생소함 때문에 의문점과 망설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연금 가입자들과 노동조합 등 사회적 주체들과 협의하고 지혜를 모아 합의를 이뤄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원장 신입사원교육

"솔직한 회사 상황을 들을 수 있었다"

지재식위원장이 지난 15일 원주리더십아카데미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위원장 신입사원교육이 1월 15일 원주리더십아카데미에서 열렸다.

지재식위원장은 한미FTA협상, 외국인 배당의 문제점, 투자축소에 대한 문제점 등을 설명하면서 노동조합의 입장이 경영진과 다를지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KT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미FTA협상을 통해 통신시장이 개방된다면 지금까지 순이익의 50%이상을 배당하고 있는 KT의 배당정책을 더욱 확대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원장의 강의가 끝나고 신입사원의 질문이 계속됐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 KT노동조합의 파업, 민영화, 구조조정 등 많은 질문이 이어졌다.

지재식위원장은 KT에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될만큼 절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하고 정말 절박하다면 외국인에게 행해지고 있는 과도한 배당부터 줄이려는 경영진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KT의 민영화는 WTO체제와 IMF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잘못된 정책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신, 전기, 철도 등 기간산업은 공공적인 측면이 매우 강한 분야로 정부의 입김이 강할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기간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재식위원장은 강의를 마치며 유니온샵제도에 의해 신입사원도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되는 만큼 주인의식을 가지고 조합활동을 관심있게 지켜봐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강의 이후 신입사원 김석(마케팅부문 정보보호본부)씨는 "노조의 구체적 활동에 대해 질문은 못했지만 회사와는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서 "회사의 세부적 상황을 솔직하게 말해주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혜륜(강남본부 영동지사)씨는 "신입사원 연수프로그램이 좋은 경험인 것은 분명하지만 시간적으로 매우 빠듯하게 진행되다보니 피로와 졸음 등으로 집중력이 떨어져 안타깝다"며 신입사원 교육의 혹독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금속노조 임원 선거 5파전 확정

부위원장 17명 출마 … 민주노총 선거사상 가장 치열

2007년 한국 노사관계 태풍의 눈의 될 15만 금속산별노조 임원 선거 후보등록 마감 결과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후보로 5팀이 등록을 마쳐 민주노총 선거 역사상 가장 치열한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금속노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태현)는 22일 오후 5시 금속노조 임원 후보등록을 마감했다.

기호 1번 위원장 후보는 기아차노조 교육위원을 지낸 정형기 조합원이 출마했다.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처장에는 이장우(현대차), 김현미(서울지부)가 등록했다. 기호 2번 위원장 후보는 기아차노조 수석부위원장을 지냈던 이정행 조합원을 위원장 후보가 출마했다.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처장에는 전규석(현대차), 최윤정(금속노조)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기호 3번 위원장 후보는 금속산업연맹 부위원장을 지냈던 기아차 박병규 조합원이다.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처장에는 백은종(현대차), 정식화(케피코) 후보가 등록했다. 기호 4번 위원장 후보는 현 금속산업연맹 위원장인 두산인프라코아 전재환 조합원이 출마했다.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처장에는 이재인(현재차), 맹주인(기아차) 후보가 등록했다. 기호 5번 위원장 후보는 현대차노조 위원장을 역임한 정갑득 조합원을 위원장 후보로 내세웠다.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처장에는 남택규(기아차), 최용규(세종공업) 후보가가 등록을 마쳤다.

여성과 비정규직 할당제에 따라 여성부위원장에는 기호 1번 정혜경(현 금속노조 여성부위원장) 후보와 기호 2번 조미자(현 금속산업연맹 여성부위원장)이 출마해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비정규직 할당 부위원장은 금속 비정규 대표자회의를 열어 후보를 논의했으나 투쟁이 치열한 현장 여건으로 인해 끝내 후보를 출마시키지 못했다.

부위원장 후보 경쟁율 3 대 1

5명을 뽑는 부위원장 후보에는 총 15명이 출마해 평균 3대 1의 치열한 경합이 벌어지게 됐다.

부위원장 후보는 기호 1번 고남권(전 대우차노조 조직실장), 2번 김유성(현 금속노조 대의원), 3번 김일섭(전 대우차노조 위원장), 4번 우병국(현 금속산업연맹 부위원장), 5번 오상룡(현 금속산업연맹 경남본부장)가 등록했다. 이어 6번 김천욱(현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7번 박근태(전 현대차노조 남양본부장), 8번 박준석(현 현대차노조 기획실장), 9번 이시욱(현 금속산업연맹 부위원장), 10번 이성식(전 기아차 판매지부장) 후보다. 11번 손송주(전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12번 허성관(현 금속산업연맹 부위원장), 13번 홍광표(현 금속산업연맹 사무처장), 14번 김조현(전 대우차노조 쟁의부장), 15번 이우봉(현 금속노조 부위원장) 후보 등 총 15명이 등록했다.

부위원장 후보는 다득표한 5명 중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당선되며, 과반수를 넘지 못할 경우 2차 투표에서 찬반을 물어 50% 이상 득표할 경우 당선이 결정된다.

26~28일 결선투표

금속노조는 22일 저녁 5시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해 3주간의 선거운동을 거쳐 2월 13~15일 사상 최대규모의 조합원 직선 선거로 선거를 치른다. 1차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후보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가 26일~28일 결선투표를 벌여 15만 금속노조를 이끌어 갈 위원장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중앙선거관리위원구성

노동조합은 24일 13:00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는 중앙집행위원 39명 정원에 39명이 참석 성원이 이뤄졌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아래와 같이 위촉했다.

- 아 래 -

▲이종주(전남지방본부 · 목포지부) ▲유재권(전북지방본부 · 전북망건설센터지부) ▲양해용(본사지방본부 · 국제위성지부) ▲이재웅(강북지방본부 · 가좌지부) ▲이종태(강남지방본부 · 북수원지부) ▲박상일(부산지방본부 · 미남지부) ▲이규동(대구지방본부 · 수성지부) ▲김상곤(서부지방본부 · 공항지부) ▲박한수(강원지방본부 · 삼척지부). 끝.

연맹 제1차 단위노조대표자회의 개최

'승리하는 2007년' 을 향한 담금질 시작

연맹은 지난 30일 KTF노동조합에서 각 가맹조직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단위노조대표자회의를 열고, 상집수련회에서 논의한 2007년 사업계획을 심의하였다.

'IT연맹 총단결로 2007년 승리하자!' 라는 당찬 결의를 모은 구호로 시작된 대표자회의에서 박흥식 연맹 위원장은 "민주노총 39차 정기대대 및 임원선거가 끝난 시점에서 연맹 총화합을 도모하고, 선거 과정에서 연맹이 제기한 문제들이 이석행 신임 집행부의 사업에 적극 반영되도록 견제와 비판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각 가맹조직의 현황을 점검하는 단위노조 보고에서는 특히, 세화ELC 김근환 위원장이 사측의 임단협 불이행 사례를 전하고, 연맹의 적극적인 관심과 연대를 주문하였다.

2007년 정세 분석으로 시작된 심의에서 ▲2007년 사업계획 건 ▲규약개정에 관한 건 ▲예산지출 심의 건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건 ▲여성할당제 비율 건 등을 논의하고, 세부작업을 더해 2월 14일 예정인 중앙위원회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최종 확정키로 하였다. 사업계획과 관련 2007년 연맹 키워드인 '산별전환' 에 대해 각 대표자들은 의견을 함께 나누고, 모든 조직과 정책 역량을 다해 산별노조 건설에 앞장 설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날 논의된 안건들은 연맹 상집회의를 거쳐, 필요 시 2월 초 대표자회의를 통해 재심의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창당 7주년 기념대회

민주노동당 7주년 기념대회가 지난 30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지금으로부터 7년전 2000년 1월 30일 정당정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기위해 공식창당 됐다"면서 "민주노동당이 40개 지역, 1만 3천명의 당원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192개 지역위원회, 2300개 분회, 7만 3천명의 당원을 가진 정당으로 성장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당원들의 힘으로 집권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당원들에게 감격을 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권영길 원내대표는 "7년전 오늘 일하는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피는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다"며 "이념, 정책, 진보정당으로 총칼로 정권을 잡고 만든 정당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대선에 IMF를 불러 온 원흉 한나라당의 집권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국가권력을 장악하겠다는 한나라당에 맞설 수 있는 자격은 사이비 개혁세력인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오직 민주노동당만이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대표들의 인사말이 끝나고 상징의식이 시작됐다. 커다란 복돼지 한 마리가 등장하고 곧이어 박용진 대변인이 "민주노동당은 당원들이 당비로 돈을 잘 모아 주기 때문에 돈보다는 표를 달라"며 "500만표 득표을 위한 각계대표들의 민주노동당 지지 공개투표"를 제안했다.

민주노총, 전농, 전여농, 민중연대, 한청, 통일연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나와 민주노동당에 표를 몰아 주는 상징의식을 거행했다.

노동조합, 회사임원 교육실시

"더 이상의 특별명예퇴직 · 비영업부서 상품판매는 안된다"

노동조합 최광수 정책기획실장이 1월 17일 회사의 임원교육에 강사로 나서 현장조합원의 아픔을 이해하는 경영을 해주길 당부했다.

최광수 실장은 상품판매 문제를 거론하면서 내부경쟁으로 인해 상품판매가 과열 · 과장되고 결국은 정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경영상의 책임을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떠넘겨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03년 5500여명의 직원이 명예퇴직으로 현업일선을 떠났다면서 또다시 명예퇴직을 실시한다면 이는 경영진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리자들은 내부조직의 단결을 위해 노력해야지 조합원들의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광수 실장은 비영업부서 상품판매와 명예퇴직 등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거듭강조했다.

한편으로 노동조합과 현장 조합원의 아픔을 이해하는 감성경영을 해주길 당부했다.

끝으로 최광수 실장은 "노동조합은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경영진 또한 노동조합을 적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계 일체복 A/S 안내문

■ 점퍼 세탁방법

- 점퍼는 반드시 드라이크리닝 하십시요(털은 세탁시 분리하여 전문점에 세탁의뢰 하시기 바랍니다.)

■ 가디건 세탁방법

- 가디건은 "드라이크리닝"과 "손세탁(울세제)"이 가능합니다. 단, 세탁후 열건조를 금하여 주십시요

■ A/S 신청방법

1. 택배이용시
   - 제작업체 본사 A/S센터에 직접 택배발송, A/S 접수 (택배요금: 착불)
   · LG패션 : 현대택배(1588-2121)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남동공단 663-4, 96B 5L (담당자 : 박용필 , TEL: 032-816-8420, FAX: 032-819-9008)
   · 파크랜드: 삼성택배(1588-3312) ➔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70-7번지 (담당자 : 차영석, TEL: 051-526-3799, FAX: 051-531-2505)

※ 참고사항 : 상기 택배업체 이용이 곤란할 경우, 모든 택배사 이용가능(이용요금: 착불)

2. 업체 매장 직접방문시
   - 업체별 담당자에게 전화 접수 후 제작업체 매장을 방문하여 A/S 접수(LG패션 : 박용필 032-816-8420, 파크랜드 : 차영석 051-526-3799)
   · LG패션 : LG패션 전국 매장 및 백화점 매장(매장명: 마에스트로, 닥스, 헤지스(hazzys), 라푸마(lafuma), Ashworth, 타운젠트 및 상설할인매장)
   · 파크랜드: 파크랜드 전국 매장 이용가능

3. 교환 및 반품에 따른 A/S 기간 : 약 7일
4. 수선에 따른 A/S 기간 : 약 10일
5. A/S발송시 A/S신청서를 물품과 동봉하여 해당 업체에 발송
6. 사이즈교환만 가능(품목변경 불가)